

환경계소식

환경부, 보전지역 인근 개발사업 자연경관영향 심의 받아야

내년부터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경계로부터 500 미터~5 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 적용대상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이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24개 행정계획, 수질보전구역 등에서 시행되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50 미터 이상의 다리, 자연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등 46개 개발사업들은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종전의 생태계 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고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구역이나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나 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이 차등 적용된다.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채굴사업 등에만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앞으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도 부과키로 했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국립환경연구원, 국제환경정책연수 과정 개설

국립환경연구원은 금년부터 아시아 신흥산업국 환경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을 개설

하고, 그 첫 번째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환경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6.13~7.8 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 베트남(5), 인도(3), 인도네시아(3), 말레이시아(3), 태국(2), 라오스, 몽골, 필리핀, 러시아, 캄보디아 각 1명

동 프로그램은 최근 환경산업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산업국 환경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양국 간 환경협력을 증진시키고 친한인사 육성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진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과정은 대기오염관리·정책, 폐기물관리정책 등 강의(26과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우수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학습(6개소),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5개소), 연수생 국가보고서 발표,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연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참가국 및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3~6개월의 장기연수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 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지방도시의 도시하천을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하천은 과다한 도시개발수요에 따라 복개 등을 통해 도로나 주택 건설용 토지로 대체되었다.

주차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경관, 생태계, 홍수관리에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98년부터 1,600억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하천환경을 복원하고 치수안전도를 높이는 시범 사업을 오산천(경기 오산) 등 7개 하천에 대하여 추진한다.

이중 경안천(경기 광주)과 경천(전북 순창) 등 4개 하천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내년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전국의 도시로 확대한다. 2년간에 걸친 조사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전국 총 50개(30개 도시)를 대상지구로 선정하였고 '05~'11년동안 약 1조2천억원(금년 99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금년에는 함평천(전남 함평) 등 15개소의 설계를 시작하고 낙동강(부산시)과 안양천(안양시) 2개소는 공사에 들어가는 등 17개소가 우선 추진된다.

함평군의 테마는 '나비'이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개최를 준비중이며 환경이 훼손된 함평천에 나비 생태계를 복원하여 나비관광도시로 육성한다.

안양시는 '버들치' 도시이다.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이 1급수 어종인 버들치 서식처로 다시 태어난다.

상주시의 테마는 '자전거'이다. 강과 도심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해 자전거 관광도시를 만든다.

이러한 도시별 테마는 계획초기부터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와 같이 공청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치수 안전도와 하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심과 외곽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가 살아나고 도심의 열섬 효과가 완화되는 한편 녹지공간도 늘어난다.

나아가 지역의 관광·레저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 에너지기술 과제에 3년간 21억원 지원

에너지기술 학술진흥사업 23개 과제에 3년간 21억원이 지원돼 에너지분야 석·박사급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에너지기술 학술진흥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를 확정하고 대학을 대상으로 에너지분야 석·박사급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과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4월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총 67개 과제중 사전 및 공개평가를 통해 선정·확정된 것으로, 총 23개 과제에 최대 3년간, 정부지원 21억원(올해 지원 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학술진흥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자유공모방식으로만 추진했으나 올해는 지정공모해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과제중 '용사공정을 이용한 초전도 파이프 및 코일제조 기술'은 기술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인정되는 학술적인 중요 연구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발전부문 베이스라인 설정'은 지정공모로 기후변화협약의 발전부문 대응전략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과제로 평가됐다.

또한 'EDLC(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전기이중층 축전기)'를 이용한 낙뢰에너지 저장은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로 상용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연현상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론적 접근 타당성이 인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가동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 3개 군과 힘을 합해 용담댐 상류에 산재되어 있는 64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관리」를 시작했다.

환경기초시설을 유역별로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국내 최초인 이번 '용담댐 유역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 유역의 중심하수처리장인 진안하수처리장에서 3개 군 중심하수처리장, 5개 단위 하수처리장, 56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원격으로 제어·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량 및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수질개선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예산절감 등이 가능해졌다.

수자원공사는 "02년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을 시작으로, 현재 대청댐과 탐진댐 상류의 환경

환경 소식

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중인 7개 다목적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역-지방, 상수-하수 모두를 아우르는 Total 물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전북 진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유역별 통합관리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보고회'가 금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군,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사이버컨설팅(Help-Line)」실시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에서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예방과 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사이버컨설팅(Help-Line)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관련 기술, 기법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종합정보 홈페이지(www.wastezero.or.kr) 내에 사이버컨설팅 코너를 마련, 감량화 기술 및 기법 등의 확산·전파를 위해 감량화 기술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감량화컨설팅' 코너에서 전문분야, 업종별로 구분된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 중 원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하여 필요한 기술, 기법, 정보에 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된다.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장 폐기물을 감량을 위한 공정 개선, 재활용회수체계 구축과 적정처리 등 폐기물관리 전반의 현장 기술에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비용절감, 환경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 제고가 예상된다.

또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사업장폐기물 감량성과 제고

를 위해 감량화 추진사업장에 시설자금 응자지원 및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업종별 감량화 가이드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확산대회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광역상수도 준공식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곡댐 하류(울산시 울주군 소재)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차관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권광역상수도 준공식을 가졌다.

낙동강 폐놀사건 이후 지난 '95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10여년만에 준공되는 울산권광역상수도는 총 2,7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취수원인 대곡댐 및 대체도로 10.45km와 관로 9km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본 사업은 사연댐 상류에 대곡댐을 건설하고 두 댐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울산지역에 하루 22만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그 동안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울산시 지역에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 댐 가운데 처음으로 댐 및 상류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수질조사 및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최소면적인 저수지 수면과 대곡댐과 사연댐을 연결하는 하천만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으며, 댐사면 친환경층 도입, 체육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환경친화적인 댐으로 건설되었으며, 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완비, 인공습지 조성, 쓰레기 차단망 설치 등 수질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다.

국립환경연구원, 「배출계수 데이터 정보검색 시스템」 개발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윤성규)은 대기배출원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등 연구자료를 쉽게 검색, 조회할 수 있는 배출계수 데이터 정보검색 시스템(NEFInfo, National Emission Factor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을 개발하여 금년 8월부터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각종 대기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Visual BASIC을 기반으로 만든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료입력·출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으며, 그간 연구원에서 조사한 산업시설, 인위적 VOC 배출원, 자연 VOC 및 악취 배출원 등 주요 대기오염원에 대한 주요 결과가 DB로 담겨있으며, 시스템에 수록된 대기오염원에 대한 DB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중 「대기 Inventory 작성과 배출 계수 개발 및 오염배출량 산정 연구」를 인하대, 건국대, 대전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4년 동안 수행(2001~2005) 하였으며, 연인원 280여명의 연구진과 총 26여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데이터 정보검색 시스템(NEFInfo)은 지난 5월 10일 특허등록이 최종 결정되었으며(특허 10-2002-0052592호), 총 13개 대기오염원 분야 97개 업종에 대한 3,500여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계수 및 오염배출특성 자료가 담겨져 있다.

NEFInfo는 현재 미국 EPA에서 Web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FIRE(Factor Information Retrieval)와 유사한 시스템이나, FIRE는 단지 대기오염 배출계수에 대한 DB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연구원에서 개발한 NEFInfo는 배출계수 뿐만 아니라 공정의 특성, 배출특성 자료, 배출량현황, 통계그래프,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모두 검색·조회할 수 있는 풍부한 DB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악취 배출원 등에 대한 최근의 배출계수 연구결과를 함께 수록하였다.

금번 NEFInfo 개발로 국내 실정이 최대한 반영되고, 보다 개선된 대기오염 배출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대기환경개선 정책 지원과 관련된 연구사업 및 환경영향

평가 등에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자료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에서는 향후 NEFInfo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7월까지 수록된 정보자료를 최종 update 할 예정이며, 8월 이후에는 이를 Web 또는 CD로 배포·제공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체결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지역 31개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기업체가 스스로 저감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서명식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인수), 인천광역시장(서정규 환경녹지국장 참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장철균), 31개 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업자가 스스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28개 기업 31개 사업장(환경친화 기업 11개소 포함)은 기아자동차(주), 삼성전자(주), 동부제강(주), 씨제이(주) 등으로 2001년도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전 및 생식독성물질 등을 협약체결 3년 내에(2007년) 30%, 5년 내에(2009년) 50%를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이나 '누출탐지보수(LDAR)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감축하게 된다.

또한, 협약체결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개선노력과 이행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약 참가기업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협약체결 3년 후(2008년)와, 5년 후(2010년) 두 번에 걸쳐 목표달성을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분야

환경계소식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협약 추진실적 우수사업장에 대한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통하여 방지시설 투자 소요비용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동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협약기간('05.6.~'09.)동안 화학물질배출량 600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기준으로 약 15% 저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수도권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작업장 환경도 개선되어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수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강수량, 하천수위, 유량 등 물 관리에 필수적인 '수문(水文)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하늘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것이 천문(天文)이라면 수문(水文)은 강수량, 하천 수위·유량 등 물에 관한 기초정보를 측정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하천수 이용, 홍수예보,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댐·제방·교량·택지개발 등 각종 SOC 사업의 설계 등에 필수 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자연재해나 자원고갈 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수문조사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 빈발, 기후변화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55개국 40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지구관측시스템(GEOSS)이 출범하여 기상·기후·재해·건강·에너지·물·생태계 등 9개 분야의 자료를 세계적인 표준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수문조사에 대한 전문기관 부재, 투자 부족, 기술개발 저조 등으로 물에 관한 살아 있는 정보가 없어 효율적인 물 관리가 미흡했다.

그 예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임진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문자료 확보를 통해 홍수조절 효

과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도 이러한 수문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건교부는 물 관리에 필요한 수문조사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수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은 2011년에 하천의 주요지점에서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8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홍수통제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물 관리 관련 업무중 현장조사 업무를 법정단체인 전문기관(가칭 '한국수문조사원')을 설립, 위탁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수문조사 측정망 확대, 원격자동유량측정 시설 설치, 실시간 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계획의 집행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물 관리 기초정보의 정확성 향상으로 물 부족에 대비한 물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홍수피해를 줄이는 등 물 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물의 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수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에서는 기초재활용시설인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선별장을 대상으로 시설설치 기술지원 컨설팅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정부(환경부)가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선별장 등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고로 지원되어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동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재활용선별장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598호, 2004.12.30)」을 마련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기본매뉴얼」을 제작,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경험 이 풍부한 공사 기술진이 직접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에 최적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용역비 절감과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 국가 재활용정책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설설치업무를 대행도록 하여 향후 건설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약취, 소음 등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지역 7개소 선정

환경부는 기존에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새로운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지역으로 대구 북부하수처리장 등 7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7개소에서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는 양은 연간 81백만 톤으로 이는, 인구 60만명의 안양시에서 연간 사용하는 수돗물 양과 비슷하며, 전북 부안댐의 연간 용수공급량(35백만톤)의 2.3배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강변여과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 물 절약, 중수도 의무화 등 물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점증하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유도하여 왔다. 그동안 고도처리과정을 하수처리장에 도입함에 따라 방류수질이 양호하여 각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나, 용수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과 재이용을 위한 초기투자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재이용이 널리 확산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복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총 7개소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7개 하수처리장은 다음과 같다.

- 공업용수 분야는 대구 북부(대구염색단지내 121개업체에 100천톤/일 공급하여 용수 공급단가 톤당 440원 절감), 경기 오산(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인근 반도체·제지업체에 12천톤/일 공급하여 공급 단가 톤당 850원 절감)으로 선정됐고,
- 하천유지용수 분야는 충남 공주(연중 고갈로 하천생태계가 고사된 제민천의 유지용수로 10천톤/일 공급하여 백제의 옛모습 복원), 충남 천안(고갈된 천안천에 하수처리수 30천톤/일 공급하여 생태하천 조성 및 친수환경 제공), 전남 여수(연등천 하천기능 회복을 위해 유지용수로 35천톤/일 공급하여 해양도시내 새로운 수변문화 공간 형성)으로 선정,
- 농업용수 분야는 전남 강진(160㏊ 농경지에 하수처리수 6천톤/일을 안정적인 농업용수로 공급, 농민수원사업 해결)으로 선정,
- 복합용수 분야는 인천 송도(하수처리수 30천톤/일을 화장실 용수, 도로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다용도로 송도신도시에 공급)로 선정됐다. 